



법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제동’

재판부 “환경 검토 미흡”

국토부 계획 위법 판시

2028년 완공 목표 차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환경 영향 검토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취소 판결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 큰 변수가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항 부지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1,297명이 2022년 9월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부실한 평가였다. 법원은 “새만금 지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인천공항의 수십 배,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며 “국토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수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역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 거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공항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토부가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경 검토 과정의 미흡함을 강조했다.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그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은 비용편익비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기업부스를 순회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종합해 사업 계획의 ‘이익 형량’에 차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건설단체연합회 등 지역 경제계와 각종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한 도민은 “속도 위주의 개발이 아닌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대안 마련과 생태계 보전 방안,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1일 전했다.

또한, 전북도는 “공항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북도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 등 지역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지역 개발 정책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지사,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에

“전북 발전 염원 무시… 강력 유감”

“개발핵심 동력 중단 있을 수 없어… 국토부와 즉시 항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 판결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전북 발전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뜻과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개발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하여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전북의 미래 개발에 대한 염원을 간과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넘어선,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동력이자 국가기간 인프라임을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

로젝트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일관되게 준비해 온 중차대한 사업의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이번 상황을 보며 과거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되면서 지역이 감당해야 했던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고통의 시간을 상기시켰다.

그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지금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조속히 종식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전북도민에게 “전북이 하나로 뭉쳐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2025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17일 전주대 하림미션홀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취업 지원의 장을 연다.

도는 오는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북경진원과 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직자를 지원한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발성 채용 행사를 넘어 행사 전·후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채용 지원이 이어진다. /이만호 기자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본격

전북자치도, AI·데이터 산업 육성 등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일 도는 다가오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AI·데이터 산업 육성, 주력 산업과의 AI 융합, 그리고 AI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활성

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북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전북 AI 산업 육성 방향 연구’를 완료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